

## 總 · 學長 直選制만이 민주적 방법인가

全 得 柱  
(崇實大 社會科學大學長)

한 나라의 大學의 機能은 研究(research), 教授(teaching), 그리고 국가·사회 발전에의 奉仕(service)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自我實現(self-realization)과 국가·사회 발전 및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近代大學(modern universities)은 4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급격한 量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이러한 量의 大學 成長은 大學教育을 통하여 많은 국민에게 自我實現의 보다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의 量産으로 사회·경제 발전에는 물론 국제적 관계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대학 성장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否定的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첫째로 고도 技術·情報化와 國際的 開放化에 대처한 대학

교육의 質的인 落後性의 문제이며, 둘째로 우리나라 社會文化의 반영이기도 한 대학 사회의 權威主義 문화와 파벌주의의 淸산 문제이고, 셋째로 우리 社會의 반영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의 결여 현상이며, 넷째로 大學行政의 合理化와 大學 運營의 民主化 문제이다.

실상가상으로 우리의 大學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政治勢力들의 영향을 받아 왔고, 극소수인 일부는 非合法的 政治勢力化 되어 가고 있다.

일부 學生들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政治事變(제 1 공화국, 제 4 공화국과 제 5 공화국의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해 왔고 逆說的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들 大學生들이 간접적으로 수립했던 제 2 공화국을 붕괴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일부 大學生은 한편으로 나라의 民主化를 위한 첨

병 역할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大學 본연의 기능 수행을 저해시키는 역할도 해 왔다.

제 5 공화국의 權威主義的 政治 체제가 붕괴된 전환점으로 이해되는 1987년의 6·29 선언 이래 대학도 정치의 民主化와 더불어 대학 자체의 自律化와 民主化의 소리를 더욱 높게 부르짖게 된 결과, 일부 國立大學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무시하고 直選制에 의한 總 · 學長 選出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일부 私立大에 있어서도 총장 직선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총 · 학장의 직선제가 실시된 대학들은 형식적이거나 문교부 또는 財團理事會에 의해서 추후 승인 형식을 밟았지만 文敎部와 財團은 그들의 무력함을 노출했던 것도 사실이다. 大學의 自律化 및 民主化를 원하고 있는 기타 대학들도 현재 總 · 學長 選出에 대한 相異한 見解들을 갖고 무엇이 民主的 選出 方法인가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부분별한 간섭과 재단의 횡포로 인하여 政治的 民主化와 함께 大學에 있어서도 그 반대급부로 총장을 選出하고 財團과 政府를 무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필자는 이것을 하나의 一時的 현상이지 普遍的 現狀이 될 수 없다고 사료한다.

大學의 民主化는 그 本質에 있어서 교수들의 자유로운 學問 研究를 정부나 학교 당국이 보장해 주고, 또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相異한 理論과 實際를 客觀的으로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상이한 問題 認識과 問題解決의 方法論을 터득하게 하는 조망과 機會를 부여하는 過程이라고 하겠다. 共產主義나 全體主義에 있어서 그 學問이 본질적으로 黨派性을 요구하는 데 반해 自由民主主義 體制下에서의 학문은 어디까지나 客觀性을 요구하므로 그 研究의 自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大學의 民主化의 本質은 상이한 理論들의 研究와 教授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데 있으며 그 부차적인 측면은 行政組織·人事·財政과 學事 등 大學 運營의 민주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大學 總·學長의 直選은 기실 大學 民主化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大學의 행정 체제가 權威主義的 寡頭 體制 내지 一人體制의 성격을 가졌었기 때문에 大學들이 그들의 민주화 과정에서 總·學長의 選出 방식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大學 總·學長을 選出하는 데 있어서 그 共通된 현상을 도출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일부 大學은 그 大學이 지니온 構造의 矛盾을 너무나 심각하게 認識했기 때문에 이를 急進的 方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의 大學이 있는가 하면, 일부 다른 大學들은 그 構造의 矛盾을 인식하되 다른 大學이 이러한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大學 총장을 選出하여 大學의 민주화에 기여하겠다는 進歩改革的 方法을 택하는 大學도 있다. 그리고 어떤 大學은 이러한 민주화 바람 속에 내부적 矛盾은 거의 없지만 나라의 民主化 바람에 부응하여 총장을 뽑되 재단 이사의 목소리도 함께 고려하는 보다 냉철한 개혁적 方法을 채택하는 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大型화된 오늘의 大學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교수들 또는 학교의 기타 세력들에 의한 總·學長 直選 方法만이 大學의 民主化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否定的인 견해를 갖고 있다. 大學은 그 大學의 特殊性과 普遍性을 동시에 고려해서 大學의 민주화를 이룩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총·학장 選出 방식도 반드시 교수나 기타 세력에 의한 직선만이 보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衡平主義를 벗어난 平等主義에 입각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大學 總·學長의 直選이 大學 본연의 民主化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

를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大學의 本質的 機能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大學의 總·學長은 과거의 家族的 분위기의 行政體制에서 탈피하여 이전보다 行政 合理化·效律化·內實化를 기해야 하는 바, 장차 大學의 총·학장은 멀지 않아 教育行政 專門家로서 정부나 재단 이사회의 決定을 오로지 執行하는 최고 執行者가 人氣를 무시하지 못하는 選出 방식에 의해서 뽑혀진다면 그 總·學長이 전문적 行정가로서의 役割보다는 大學 行정을 管理해 가는 데 있어 그를 뽑아 준 勢力에 대한 利益을 보장해 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大學 總·學長의 選出이나 選出 과정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파벌의 심화는 大學의 통합보다는 大學인의 분열에 더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교수든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고용원이든 간에 그들에 의해서 뽑혀진 총·학장은 그 총·학장에게 반대할 소수를 법과 規定에서는 보호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少數를 얼마만큼 보호할 수 있을지의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네째, 教育行政家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학문의 權威者나 기타 人氣가 있는 교수가 大學의 총·학장으로 選出되었을 때, 이는 그 大學의 行政 運營의 民主化에는 어느 정도 부응된다고 할 수 있으나 행정의 效律

化·合理化는 매우 의문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이 정부나 재단 이사회를 무시한다면 과연 어느 재단이나 정부가 자기의 대학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의욕이 생길 수 있는가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말부터 구라파에서 한데 총·學長 直選制가 도입되었으나 大學 本然의 機能 축소와 제한적 마비로 인해 이러한 방식은 거의 사라져 가는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앞으로 大學의 民主化와 自律化의 물결과 함께 大學 總·學長의 選任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대학 本然의 機能을 극대화하고 대학의 民主化와 自律化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필자의 줄거리를 간략히 개진하고자 한다.

대학이라는 體制는 그 본연의 기능인 가르치고 배우며 연구하고 국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크게 다섯 개의 構造로 되어 있다.

첫째로 大學의 최고 결정 기관인 理事會, 둘째로 여기서 결정된 기본 방침에 따라 집행하는 최고 집행관인 總·學長, 셋째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教授, 넷째로 배우기 위해서 조직에 가입한 學生, 다섯째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돕는 行政(고용) 職員 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財團理事會의 힘포가 韓國 大學史에서 심지어 대학의 私有化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컸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專門家인 教授나 學者가 이사회 政策 決定에 참여하거나 집행하는 일까지 잘 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다섯 가지의 기본 구조가 橫的인 牽制와 均衡을 이루지 못하고 縱的인 조직으로써 학생이 가장 弱點을 받았던 시대가 제 5공화국까지의 大學의 실정이었다. 때문에 大學 體制의 民主化란 이러한 다섯 세력을 어떻게 均衡 있게 調和시키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財團理事會는 그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大學 發展을 위한 財政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사회로 바뀌어야 하며 그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 財團은 그 만큼의 목소리도 가져야 한다고 본다. 大學의 總·學長은 이제 학문의 權威者나 사회적 명성만을 향유하는 人氣者가 최고 행정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의 재단 이사회나 정부의 올바른 견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最高執行者로서의 教育行政家가 되어야 한다. 教授는 오로지 충실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의 權威者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行政과 補職에 연연하는 教授像을 쇠신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행정(고용) 직원은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확신하고 항상 자기 반성을 하는 세심한 支援者가 될 때에 일부 急進 學生들의 大學教育評議會 설치 주장도 ‘대학의 民主化와 自主化’ 등의 구호와 외침도 사

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大學 體制의 民主化는 바로 이 5者間의 임무의 속지와 서로가 그 機能을 침해하지 않는 데서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학 총·학장 선거는 아직 우리나라가 大學 總·學長 候補를 위한 教育行政 專門家 양성이거나 총·학장 研修制度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기간이나 教育行政 경험의 풍부한 교수 또는 학자 중에서 대학 총·학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대학 總·學長의 選出方式은 간선제를 제안한다. 우선 교수들이 각 과별로 1명씩 선출된 자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總·學長 후보들 중 2명을 뽑고 이들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하면 재단 이사회는 民主的 節次를 거쳐 그 중 한 명을 總·學長으로 任命 同議한다. 國立大의 경우도 총·학장 선출은 이와 유사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총·학장 間選制와 재단의 인정만이 그 선출의 民主的 節次나 大學 本然의 機能에도 더욱 부응할 것이다.

만약 大學職員協議會나 總學生會가 그들의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면 직원협의회와 총학생회에서 나오는 대표의 총수가 그 학교의 學科에서 선출된 교수 수의 절반이 되지 못하는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는 이미 서구에서 많은 弊端이 있는 것으로 理解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러한 選舉人團 制度를 폐지한 지 오래이다.

또한 총·학장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批判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大學體制는 權威主義的이고 1인 또는 寡頭制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체제의 民主化는 서구 선진국의 대학에 비하여 아직도 요원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총·학장에게 集中되어 있는 行政 權限을 그 상당 부분에 이르기까지, 특히 財政, 人事, 기타 행정 부문에 있어서 大學 또는 科 次元으로 이

양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대학의 총·학장은 學校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과 관련한 執行을 하되, 중앙에 集中된 모든 行政要員을 대학 내지 科에 분산시킴으로써 大學과 科의 內實 있는 自律的 發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大學 및 科 分權的 학교 행정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大學 總·學長의 選出에 있어서 이사회나 정부 당국 또는 학생 및 교직원의 목소리까지 고려될 때만이 대학

의 참된 발전이 기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입으로만 민주주의가 고조되고 몸으로 민주주의의 생활 방식을 외면하는 현재의 일부 대학 행정의 不均衡的 發展은 아무리 훌륭한 行政專門家가 나와도 대학의 民主化는 요원하기 때문에 대학내 각 구조의 均衡과 牽制를 기본으로 하는 實質的인 大學의 民主化에 부응하는 總·學長 選出方式이 더욱 논의되고 연구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